

연동형 비례대표·의원수 360명 권고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선거제 개혁안...개편 논의 본격화

광주·전남 정치지형 변화 촉각...투표 연령 하향도 권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권고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고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분위기도 더불어민주당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권고안대로 실행이 된다면 호남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9일 문화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긴 권고안을 전달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선거제 개혁에 대한 특위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해 왔다. 다만,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이 안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보다 60명 늘릴 것을 제안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유에 대해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수 360명 증원과 관련,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가가 제일 많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다만,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된다면 호남에서는 과거와 같은 ‘1당 독식’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지역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호남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이 연동형에 맞는 전략적 투표를 하면서 현재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자문위는 아울러 현행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도록 권고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민주적 방식의 공천이 이뤄지도록 공천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문위가 문 의장을 통해 정개특위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일부 자문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밝힌 이견이 ‘개인 의견’으로 첨부됐다.

이기우 자문위원은 “현행 300명 범위에서도 초과 의석이나 보정 의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개편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지역이끼주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현조 자문위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360명으로 못 박아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최금숙 자문위원은 “360명보다는 330명 정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대교구 사제 서품 김희중 대주교와 사제들이 9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에서 수품 후보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나주 SRF 갈등’ 해결 첫 단추...민·관 거버넌스 출범

각계 18명...3개월내 해법 도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내 고행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10일 출범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SRF 민·관 협력거버넌스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와 행정기관, 사회단체 대표 등 위원 12명과 검증자문단 6명으로 구성됐으며, 3개월 내 갈등 해결을 목표로 가동된다. 위원장은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이만원 광주전남혁신도시포

럼 대표가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가 참여한다. 이해당사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가동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간부, 그리고 이들을 대변할 전문가도 각각 1명씩 위촉돼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 거버넌스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와 사회단체 2곳에서도 참여한다. 여기에 법률·경영·회계·기계·전기·환경 등 6개 분야 실무 전문가로 이뤄진 검증자문단도 별도로 운영된다.

이민원 공동위원장 주재로 진행될 첫 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

며, 발전소 사용 연료 전환과 관련해 ‘100% LNG 가동’, ‘100% SRF가동’, ‘SRF·LNG 병행 가동’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1월 열병합발전소가동갈등 해결을 위해 마지막 대안으로 사전 환경성 조사를 통한 인제 유해 여부를 가리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 추진을 시도했지만 범대위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범대위는 ‘공론화 추진은 발전소 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 공론화위 구성을 거부하고, 사실상 직접투표 방식의 ‘주민 수용성 조사’ 방식

으로 발전소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민·관 거버넌스 운영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양측의 한결 같은 입장인 ‘주민수용성 조사’ 대 ‘환경성 조사’ 실시 요구는 평행선 달리기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관 거버넌스는 의결기구도 아니지만 나주 열병합발전소 갈등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라며 “이해 당사자 간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과학적인 검증, 객관적인 결론 도출을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뉴스
NAVER
포스트에서 보세요
운장현 전 시장 첫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강력 부인 ▶6면

AMOREPACIFIC CORPORATION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설날 선물세트

●3만원 이상

종합 6호
30,900원

종합 7호
35,900원

종합 8호
40,900원

러함빛 토탈솔루션
36,900원

프레시팝 베이직세트
39,900원

●3만원 이하

종합 1호
9,900원

종합 2호
13,900원

종합 3호
16,900원

종합 4호
21,900원

기업고객님의 구매수량에 따른 할인혜택은 아래 영업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00개 이상 대량 구매고객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달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